

2022. 08. 31.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 시행시 수원시 재정 변화 분석

정재진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cjj1382@suwon.re.kr

요약

- 윤석열 정부 학제개편(안)은 발표 이후 10일 만에 반대 여론에 직면, 원점으로 회귀함
- 현 정부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사무와 재정관계는 견고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부 주요 정책에 따른 선제적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윤석열 정부 학제개편(안)이 시행된다는 가정에서 이 연구는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학제개편에 따른 추가 입학인구는 4년 동안 5,42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초등생 당겨 입학에 따른 지원액은 4년간 18.4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미취학 아동 감소에 따라 미취학 아동 지원 재정은 4년간 25.0억원이 감소하여, 4년간 약 6.6억원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계됨

정책제안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는 정부간 관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함
- 정부간 관계의 개편은 사무와 재정의 재배치가 동행됨. 따라서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교육 분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라는 큰 이슈가 자리 잡고 있어 그 내용이 구체화 되는 상황에 맞추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KEYWORD : 학제개편, 교육재정지원

수원시정연구원 이슈 & 포커스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는 “공정과 시장의 자율”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경쟁 분야는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 확대됨
 - 과거 정부에서의 교육정책은 주로 과정의 형평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의 수용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음
 - 윤석열 정부에서는 형평을 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도모하며, 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국가의 발전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고 있음
 - 무엇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해 왔으며, 경제와 더불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2022년 7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율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학제개편(안)은 쉽게 동의되어지지 못했고, 학제개편(안) 발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순애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였음

-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추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학제개편(안)은 매 정권마다 또는 주요 선거마다 등장한 주요 이슈임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중 “공교육의 정상화”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함
- 현장에서의 교육관련 행정의 실현은 국가-광역-기초가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실현됨
 - 여기서의 의무는 주로 재정적인 것으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무상급식 등에 투입되는 재원을 의미함
- 비록 현 시점에서 학제개편(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매번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교육정책 개편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학제개편(안)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하 2장에서는 학제개편(안)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학제개편 관련 역사적 흐름과 주요국의 학제 등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함. 4장에서는 학제개편(안)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II. 학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여론

1

학제개편(안)의 등장 배경

- 학제개편(안)의 등장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에서 찾을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는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2대 부문(미래,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로 구성됨. 이중 교육 분야는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포함되어 있음
 - 국정목표 4는 다시 4개 약속으로 구성되며, 이중 “15번.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에 포함된 국정과제 84가 학제개편(안)의 등장 근거이자 배경임

[표 1]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4(교육분야 국정과제)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주요 내용	초등전일제 교육, 교육사각지대 해소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과제 84에 포함된 “초등전일제 교육”은 유아·초등 돌봄을 통합하여 연계하고, “교육사각지대 해소”는 통합지원과 사례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체계마련이 포함되어 있음
 - 전술한 두 세부 정책의 실행을 위한 고민 과정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유아를 초등교육에 빨리 편입시키는 방안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학제개편(안)으로 등장하였음

2 학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 학제개편(안)은 현행 초등(6년) - 중등(3년) - 고등(3년) - 대학(4년)은 유지하되 2025년부터 초등학교 진입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낮추는 것이 핵심임
 -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입학년도를 당겨 2029년부터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 학제개편(안) 시기별 반영 계획

입학년도	입학 대상(만6세 + 만5세 혼재)
2025년	2018년 1 ~ 12월 생 + 2019년 1 ~ 3월 생
2026년	2019년 4 ~ 12월 생 + 2020년 1 ~ 6월 생
2027년	2020년 7 ~ 12월 생 + 2021년 1 ~ 9월 생
2028년	2021년 10 ~ 12월 생 + 2022년 1 ~ 12월 생

-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항에서는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현재 만7세(우리나라 기준 8세)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기준 이긴 하나 만6세(우리나라 기준 7세)도 입학이 가능함
 - 학제개편(안)에서 만5세라 함은 입학이 가능한 대상의 최저 연령기준이고, 지금까지 입학가능 최저 기준 연령은 만6세임

3 주요 여론 및 찬·반 입장

- 학제개편(안)이 7월 29일 발표됨과 동시에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음
 - 주요 언론사별 학제개편(안) 관련 헤드라인은 “부모 반발”, “불통 학제개편”, “진화 급급” 등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음
 - 이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함
 - 물론 부분적으로 찬성의 입장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 EBS가 8월 8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는 76.8%, 찬성은 17.4%였음¹⁾
- 주요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학제개편(안) 관련 주요 찬·반 의견

찬성	반대
- 교육과 돌봄의 격차 해소	-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
- 빠른 공교육 편입, 소득에 따른 격차해소	- 학교 시설 재배치, 교원 수급 문제
- 사교육비와 육아부담 감소	- 특정 시기 고입·대입 경쟁률 증가
- 경제활동인구 조기 확보	-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 증가

- 반대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8월 9일 국회 업무 보고에 참석한 교육부 차관이 만5세 입학 정책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발표 후 10일 만에 학제개편(안)이 철회됨

1) EBS에 따르면 해당 설문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8%,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임

Ⅲ. 학제개편 관련 역사적 맥락과 주요국 학제 비교

1

학제개편 논의의 역사적 맥락

- 우리나라의 학제는 1951년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초(6년)-중(3년)-고(3년)-대(4년)의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학제개편을 처음 제기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님. 역대 정권 또는 선거에 직면하여 주요 이슈로 제기된바 있음
 - (참여정부) 초등학교를 1년 줄이는 대신 고등학교를 1년 늘리는 5-3-4-4 제도를 제시함. 당시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고 개정안 발의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논의 종료됨
 - (이명박 정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확산되지 못함
 - (박근혜 정부) 교육 연한을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정책화에 실패함. 특히 경제활동인구 등을 고려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얻지 못함
 - (2017 대선) 안철수 대선후보는 초·중·고 5-5-2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K-5-4-3 제도를 제안하였으나 잠시 수면위로 나왔다가 사라짐
- 학제는 변화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적가치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 지나, 수단의 숙고 및 논의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역대 정부나 선거 공약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

2 주요 국가의 학제 비교2)

○ 주요국의 학제는 대동소이한데, 이를 입학, 학기, 의무교육, 교육종료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입학) 영국은 만5세부터, 미국·캐나다는 만6세부터, 한국·일본·싱가폴은 만7세부터 입학
- (학기) 싱가포르 1월, 한국 3월, 일본 4월, 미국·영국·캐나다 9월 학기 시작. 일반적으로 1년에 2학기 체제이나 일본은 3학기제(4월-7월 중순, 8월 중순-12월 중순, 1월 중순-3월 말)
- (의무교육) 한국·일본 만18세, 미국·캐나다 만16세(주마다 차이 있음), 영국 만15세
- (교육종료) 한국·일본 만22세, 미국·싱가폴·캐나다 만21세, 영국 만20세

[표 4]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

나이	출생연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폴	영국	캐나다
학기 시작		3월	9월	4월	1월	9월	9월
만5세	2017					Y1	
만6세	2016		G1			Y2	G1
만7세	2015	초1	G2	소1	P1	Y3	G2
만8세	2014	초2	G3	소2	P2	Y4	G3
만9세	2013	초3	G4	소3	P3	Y5	G4
만10세	2012	초4	G5	소4	P4	Y6	G5
만11세	2011	초5	G6	소5	P5	Y7	G6
만12세	2010	초6	G7	소6	P6	Y8	G7
만13세	2009	중1	G8(SSAT)	중1	S1	Y9	G8
만14세	2008	중2	G9	중2	S2	Y10	G9
만15세	2007	중3	G10	중3	S3	Y11(GCSE)	G10
만16세	2006	고1	G11	고1	S4(O레벨)	Y12	G11
만17세	2005	고2	G12(SAT)	고2	JC1	Y13(A레벨)	G12
만18세	2004	고3(수능)	U1	고3(공통테스트)	JC2(A레벨)	U1	U1
만19세	2003	대1	U2	대1	U1	U2	U2
만20세	2002	대2	U3	대2	U2	U3	U3
만21세	2001	대3	U4	대3	U3		U4
만22세	2000	대4		대4			

주 : 비교 대상 국가 대부분은 조기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표에 제시한 나이는 표준 입학 기준임.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상 조기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기입학시 만6세부터 입학 가능

2)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는 나무위키(<https://namu.wiki/w/>)와 인터넷 검색(<https://blog.naver.com/neposkim2/222642762364>)을 이용하였음.

IV. 학제개편(안)시 수원시 재정 변화 검토

1 분석 방법

- 학제개편(안)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음
- 첫째,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와 미취학아동 수에 대해 추계
 - 인구 통계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매년 말 기준과 “월별 출생 자료”를 활용하였음. 전자는 매년 12월 말 기준 누계자료로 월별 전입과 전출을 포함함. 반면 후자는 전입과 전출을 포함하지 않는 매월의 출생자료임
 - 두 가지 통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95% 범위내에서 일치도를 보임(예를 들어 2018년 기준 0세아의 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8,405명인데, 월별 출생자 수는 8,832명으로 약 95% 수준에서 동일함)
 - 월별 출생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학제개편(안)의 도입 절차가 4년간 월별 입학구간을 달리하기 때문임
 - 두 가지 통계 중 2025년에 만6세가 되는 인구인 2018년 0세아를 기준학령 인구로 가정함. 2026년에는 2019년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함. 기준 인구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함
 - 월별 출생 통계는 2020년 12월까지 자료만 공개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이동평균법에 적용하여 2021년과 2022년을 추계하였음. 당겨진 입학인구는 “통계청 월별 출생자료”를 활용함

[표 5] 월별 출생 인구 추정

(단위 :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1,035	984	1,034	943	958	851	946	894	993	819	764	719
2017	962	790	908	839	771	730	754	811	817	725	709	681
2018	884	733	852	741	745	750	748	744	663	707	647	618
2019	778	670	711	655	682	633	678	631	608	641	558	546
2020	674	553	571	581	580	553	610	563	602	558	494	475
2021	606	479	493	515	512	497	547	502	532	507	443	429
2022	540	423	424	456	463	452	505	446	478	464	394	38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월별 출생

- 둘째,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지원하는 재정의 총량은 2021년 현재 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셋째, 2021년 현재 기준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액을 1인당으로 재산정
 - 초등학생 입학 연령의 하향 조정은 당초 미취학아동 수를 감소시키는 상충(trade off)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1인당 재정지원액 도출 필요
-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제변경 기간 동안 당초(만6세 입학) 기준에 따라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과 변경된(만5세 입학) 기준에 따라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2 학제개편(안)시 수원시 재정 변화

- 대상 인구 변화
 - 전반적으로 수원시 인구 변화와 유사하게 당초 입학인구는 감소세를 보임
 - ※ 최근 5년간 수원시 인구 연평균 증감률 -0.4%, 0세~7세는 6.9% 감소
 - 학제개편(안) 반영시 추가되는 입학인구는 4년 동안 5,428명이 될 것으로 예상
 - ※ 미취학아동은 개월 수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입학생 증기분만큼 동일하게 감소

[표 6] 계획 단계별 입학인구 변화

(단위 : 명)

입학년도	입학인구		초등생 전체		증감	미취학아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25년	8,405	10,564	62,451	64,610	2,159	△2,159
2026년	7,494	8,847	57,817	59,170	1,353	△1,353
2027년	6,573	7,744	52,228	53,399	1,171	△1,171
2028년	6,378	7,123	47,257	48,002	745	△745
누계	28,850	34,278	219,753	225,181	5,428	△5,428

○ 2021년 말(결산) 기준 수원시 학제별 인구 및 재정지원액

- 수원시가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총 779억원, 학생 1인당 평균 0.377백만원
- 미취학아동 지원비 317억원, 초등생 지원비 228억원 수준

[표 7] 학령별 재정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미취학아동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예산	77,869.7	31,694.8	22,828.6	12,584.7	10,761.5
인구	206,406	68,704	67,322	33,915	36,465
1인당 지원액	0.377	0.461	0.339	0.371	0.295

자료: 수원시(2021) 최종예산 합본 예산서

주) 특수학교, 평생학교, 대안학교 등 교육청에 직접 지원되지 않는 사업과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제외, 순수하게 학생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사업 중 시비만 계상

○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종합 검토

- 4년간 초등 지원액 1,840백만원 증가, 미취학아동 2,502백만원 감소
- ⇒ 수원시 교육지원 부담은 4년간 662백만원 만큼 감소 예상

[표 8] 학제개편(안)시 수원시 재정 변화 예상

(단위 : 명, 백만원)

입학년도	초등생 지원		미취학아동 지원		재정부담		
	증가 학생수	1인당 지원액	증가 학생수	1인당 지원액	초등 부담	미취학 부담	차이
2025년	2,159	0.339	△2,159	0.461	731.9	△995.3	△263.4
2026년	1,353	0.339	△1,353	0.461	458.7	△623.7	△165.1
2027년	1,171	0.339	△1,171	0.461	397.0	△539.8	△142.9
2028년	745	0.339	△745	0.461	252.6	△343.4	△90.9
누계	5,428	0.339	△5,428	0.461	1,840	△2,502	662.0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교육부가 제시한 학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분야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미취학 아동수와 초등학교 입학생수 모두 감소될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의 재정지원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의 자연 감소분이 발생될 것임
 -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그 형태가 보조사업인 경우가 많아 수원시 재정구조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 수원시의 경우 미취학아동 1인당 평균 지원액 0.461백만원이며, 초등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은 0.339백만원임
- 학제개편(안)시 초등학생 수가 증가되는 만큼 미취학아동 수의 감소가 발생되어 재정부담이 감소하게 됨

5 정책제언

- 이 연구는 비록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재정 관계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변화를 예측했다는 데 함의를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로의 이행은 중앙-지방 또는 광역-지방간 연계를 통해 실행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교육재정이 이에 해당됨
- 학제개편은 매 정권마다 또는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 이슈이며, 195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기준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개편의 가능성은 있음
 - 정부간 사무와 재정이 견고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 동향 파악과 선제적 분석이 필요함

[부록 1]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및 학생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연도	미취학아동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교육청소년과	2021년	1,151.8	6,393.9	2,950.9	2,911.2
	2020년	1,183.8	11,381.6	4,125.5	5,012.6
	2019년	1,475.6	14,401.8	5,922.2	9,145.7
문화예술과	2021년		12.3	24.7	11.9
	2020년		15.5	21.0	12.5
	2019년		20.0	29.8	20.2
보육아동과	2021년	25,698.1			
	2020년	26,245.9			
	2019년	25,534.7			
생명산업과	2021년	4,844.9	16,392.4	9,609.2	7,822.2
	2020년	4,256.5	10,523.0	7,016.8	6,066.6
	2019년	15,495.3	11,441.5	13,739.2	5,747.6
시민안전과	2021년		30.0		
	2020년		26.5		
	2019년		76.5		
체육진흥과	2021년				16.2
	2020년		1.2	2.0	19.9
	2019년		106.7	74.6	50.7

자료: 수원시(2022) 내부자료

[부록 2] 2021년 기준 주요 사업 현황(미취학, 초·중·고 지원)

(단위 : 백만원)

미취학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료(보육아동과), 9,431.2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보육아동과), 5,432.4 학교급식경비 지원(생명산업과), 3,917.8 어린이집 운영비(보육아동과), 2,136.8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육아동과), 2,069.7 	<p>(고등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경비 지원(생명산업과), 7,504.0 중·고등학생 교복비(교육청소년과), 839.4 학교 교육시설 지원(교육청소년과), 756.1 <p>(중등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경비 지원(생명산업과), 9,102.9 중·고등학생 교복비(교육청소년과), 865.7 학교 교육시설 지원(교육청소년과), 789.1 <p>(초등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경비 지원(생명산업과), 14,360.2 학교 사회복지사업(교육청소년과), 1,997.0 학교 교육시설 지원(교육청소년과), 1,618.0

자료: 수원시(2022) 내부자료

| 참고문헌 |

김원장의 싱가포르 유학노트 <https://blog.naver.com/neposkim2/222642762364>

나무위키 namu.wiki/w/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수원시, 2021, 『2021년 최종예산 합본 예산서』.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1&conn_path=I3

EBS뉴스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243199/N>



발행인 | 김선희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SRI 이슈 & 포커스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